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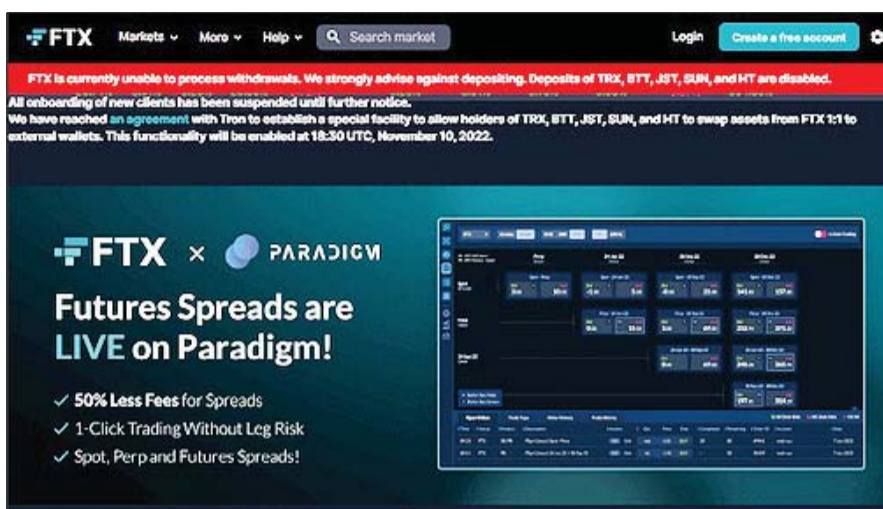
# FTX 붕괴 여파, 관련업체 '위기'... 가상자산 규제 고개드나

부채규모 66조... 업계 사상최대  
블록파이, 파산보호 신청 준비  
제네시스 트레이딩·제미니 등  
신규대출·상환·자금인출 중지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위해  
정부·국회, 입법노력 기울여야"

세계 3대 가상자산거래소FTX의 붕괴 여파로 국내외 코인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루나사태 이후 또다시 시장에 불안감을 주면서 디지털 자산 입법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지난 11일(현지시간) 파산 신청을 하면서 가상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파산보호 신청 대상에는 FTX 유동성 위기의 진원지인 알라메다리서치 등 130여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FTX는 법원에 부채가 최대 66조원을 넘는다고



FTX 거래소 홈페이지 화면.

/FTX거래소

신고했는데 이는 암호화폐 업체 중 사상 최대 규모다.

파산 신청서에는 FTX 부채가 100억~500억 달러(13조2000억~66조2000억), 채권자는 당초 알려진 10만명보다 훨씬 많은 100만명에 달한다. 채권자 대부분이 무담보 후순위 채권자인 탓에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대규모

손실도 예상되고 있다.

또한 FTX 사태로 가상자산 대출업체인 블록파이가 파산보호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파이는 FTX의 불확실성 탓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고객들의 자금 인출을 중단하고 플랫폼 활동을 제한했다

올해 7월 가상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유동성 우려가 커지자 FTX와 최대 2억4000만달러에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이 담긴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블록파이는 FTX로부터 최대 4억달러의 자금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되면서 고비를 넘겼지만 지난 11일 FTX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FTX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블록파이도 다시 위기에 몰리게 됐다.

이밖에도 가상자산대출업체 큰손인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신규 대출과 상환을 일시 중단했고, 가상화폐 거래소 제미니 역시 자금 인출을 일시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제미니가 운영하는 제미니 언은 고객이 암호화폐를 맡기면 이자를 주는 서비스로 제네시스는 제미니의 대출 파트너다. 하지만 제네시스가 신규 대출 및 상환을 중단하면서 제미니 언 운영이 어렵게 된 것이다.

해외 가상업계의 파산과 인출 중단사

태가 일어나면서 국내 투자자들 역시 두려움에 떨고 있다. 거래소를 둘러싼 잡음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고객 예치금을 채권자들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FTX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가상거래소는 "현재 우리나라는 백서를 공개한 후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사업 자금을 모집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가 금지돼 있다"며 "FTX와 같은 사태가 국내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련의 사태를 통해 규제 없는 시장은 사상누각과도 같고,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규제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세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와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1면 '사우디 40조 오일머니'서 계속

## 물가·금리 상승에... 5분기 만에 가계 실질소득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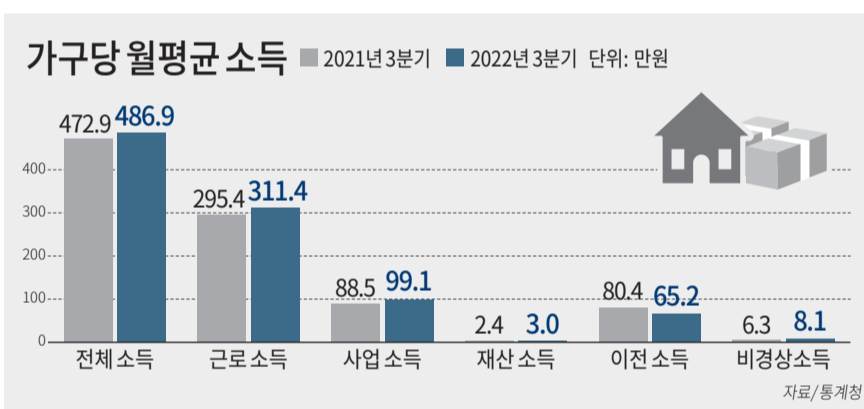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 조사

1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 486.9만원  
전분기 동기 대비 3.0% 늘었지만  
소비자물가지수 반영엔 2.8% ↓

치솟는 물가에 금리까지 오르며 3분기 가계 실질 소득이 5개 분기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에 가구는 식료품, 비주류음료 등 먹거리 소비를 줄였고, 고금리에 이자비용 부담도 커졌다. 벌어들인 돈은 줄고, 나가야 할 돈은 늘면서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통계청의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86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0% 늘었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보면 2.8% 감소했다. 실질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2분기(-3.1%) 이후 5분기 만이다. 그만큼 벌어들인 돈으로 오른 물가를 대처하기에 버거워졌다는 의미다.



3분기 가계의 근로소득은 311만4000원으로 5.4%, 사업소득은 99만1000원으로 12.0% 각각 증가했다. 상반기부터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고,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종도 개선된 영향이다.

반면, 이전소득은 65만2000원으로 18.8% 줄었다. 특히, 코로나19 지원금 등 정부 지원이 사라지면서 공격이전 소득이 43만1000원으로 26.1% 감소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근로·사업소득이 늘었어도 공격이전

소득이 크게 줄면서 소득 증가 폭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외식 등 외부 활동이 늘면서 가계의 월 평균 소비지출은 270만2000원으로 6.2% 늘었다.

하지만, 이 또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로 보면 0.3% 증가에 그쳤다.

품목별로 보면 오락·문화(27.9%), 음식·숙박(22.9%), 의류·신발(15.3%) 등은 소비 증가세가 이어진 반면 가전용품·가사서비스(-9.1%), 식료품·비주류음료(-5.4%), 주류·담배(-0.8%) 등은 줄었다.

이 과정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체 평균 이상으로 많이 오르면서 지출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며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식료품 구입이 줄었고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경조사비 등 비소비지출은 101만8000원으로 6.6% 증가했다.

여기서 이자비용이 19.9%로 크게 늘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이자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가구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385만원으로 1년 전보다 2.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비 지출과 저축 등으로 쓸 수 있는 소득 여력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처분가능소득에서 각종 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가계 흑자액은 114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6.6% 감소했다. 가계 흑자액이 감소한 것도 지난해 2분기(-13.7%) 이후 5분기 만에 처음이다. 가계부에 마이너스가 찍히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미래 에너지 사업에 삼성물산·포스코 등 5개사 컨소시엄 구성

국산 고속철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도 처음이다. 아울러 사우디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젤 기관차를 대체할 수소가 관차 공동 개발 계획도 담겼다. 현대차 그룹은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스택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로템도 이를 철도 부문에 적용하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 중이다.

롯데정밀화학은 현지에 정밀화학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MOU를 맺었다. 네움 시티 핵심이 탈석유와 첨단 제조 산업 육성인 '비전 2030', 고부가 산업 유치를 위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DL케미칼도 사우디에 합성유 폴리부텐 공장 설립을 위해 사업성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MOU를 맺었다.

미래에너지인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사업 프로젝트에도 국내 기업들이 대거 합류했다. 삼성물산과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전력, 한국남부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5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사우디 흥해 연안 안부시에 39만 6694㎡ 규모 생산 공장을 짓고 20년간 운영하게 된다.

삼성물산은 임직원 숙소 1만 가구를 짓는 '네움 베타 커뮤니티' 프로젝트도 맡았다. 철강 모듈러 방식으로 건설에 나선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한국전력이 열병합, 대우건설이 가스 및 석유화학, 효성중공업이 가스절연개폐장치 등 사업을 맡는다.

코오롱글로벌은 현지파트너사 파이 드 인터내셔널 푸드 컴퍼니(FAIDH)와 스마트팜을 추진한다. 모듈형 스마트팜 기술과 국산 딸기 종자를 현지에서 제공한다. 수처리와 풍력 발전 사업도 추진 중이다. 그 밖에도 유바이오로직스와 비피도 등 바이오 업체를 비롯해 동명엔지니어링 등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다. /김재용 기자 juk@

## 세수 호황에도 나라살림 92조 적자... 나라빚 1030조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  
3분기 누적 국세수입 317.6조  
지출 전년비 64조 늘어 536조

법인세, 소득세 등 세수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약 92조원, 나라빚은 103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재정 적자 규모가 더 커지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317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 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9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조6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기업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소득세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보다 11조9000억원 더 걷혀 98조7000억원이 들어왔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와 수입 증가 등으로 4조5000억원 늘어난 61조1000억원이 걷혔다.

세수 호황에도 정부 지출이 많아 재정 적자 폭은 더 커졌다.

총지출은 536조원으로 전년 대비 64조원 늘었다.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지출로 20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기금 지출도 34조 5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7000억원 적자를 봤다.

정부의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8000억원 적자가 났는데 적자 폭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1000억원 커졌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9월 말 기준 1029조1000억원으로 지난 달(1030조7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줄었다. 국고채 상환 등으로 채무 증가 폭이 축소된 했지만 나라빚은 1030조에 육박했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연말까지 계획한 범위인 -110조 8000억원 수준으로, 국가채무는 올해 말까지 -1037조7000억원 수준으로 각각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원승일 기자